

광주지역 재개발사업 수사 전반적 확대 '주목'

정의당 '용역금액 부풀리기·업체 선정 비리 의혹 등 26건 제보 확보' 15개 조합 고발·수사 의뢰... '구조적 비리 밝혀야' vs '사업 위축 우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재개발 관련 수사가 광주지역 10여개 재개발사업 지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15개 지역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끊이지 않았던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의 구조적 비리가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 뿐 아니라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됐던 사업 속도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등과 공동으로 월산 1구역 재개발조합과 임동 2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동 붕괴사고' 이후 광주 재개발 비리 제보를 접수받아 모두 17개 재개발사업지에서 비위로 의심할 26건의 제보를 확보했다는 게 정의당측 설명이다. 정의당 등은 이들 관련 자료를 분석, 2곳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

정의당측은 월산 1구역의 경우 지장물철거 및 이설공사비 3억4000여만원을 업체측에 이중으로 지급, 재개발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합장을 고발했다. 임동 2구역 재개발사업지에서도 4억9000여만원 규모의 비슷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의당측은 이들 2곳 사업장 외에도 13개 재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25곳 중 절반이 넘는 15곳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의당측은 고발 사업지 2곳과 학동 4구역을 제외한 계림2·4·7·8구역, 지원1, 광천, 양동3, 누문, 임(유)동, 홍흥3, 신가, 우산, 운암3단지 등 13개

재개발 사업지에서 체결된 289억여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계약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한 2곳 외에 수사의뢰한 재개발조합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대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접수받은 재개발비리 제보는 모두 26건으로, 재개발조합비리(16건), 도정법 등 절차 위반(2건), 조합설립과정(1건) 등이

다. 사업지별로는 용역금액 부풀리기, 업체 선정 비리, 업무추진비 횡령, 지분조각기, 서면결의 조작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보됐다는 게 정의당측 설명이다.

고발장과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학동 4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찰 수사가 10개가 넘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안팎에서는 조합원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경찰 수사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사업 비리가 속 시원하게 밝혀질 것

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일부 간부들의 비리로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조합원들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데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경찰은 접수된 관련 고발, 수사의뢰 사안들에 대해 지체하거나 덮으려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징어 게임' 열풍에 달고나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달고나 뽑기를 하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 태양광 시설 425곳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

전남지역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상당수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도 부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 갑)의원이 4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 시설 425곳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됐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조성된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 573곳의 74.2%에 해당한다.

산림청이 이들 4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는 13.9%에 해당하는 59개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9곳의 경우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축대 균열 ▲토사유출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등은 이미 산지태양광 시설 중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시설' (전국 573곳, 전남 425곳)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3806곳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때 광주문화방송 방화 시민 41년만에 무죄 판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문화방송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투옥된 시민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지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고(故) A(1980년 당시 18세·2009년 사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는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동구 공동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위군중 수백명이 '방송국에서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 불 질러 없애버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시위할 당시 시위대로부터 휘발유 통을 받아 B씨, 성명불상 1인과 함께 방송국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함께 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 1980년 10월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심 재판부는 A씨의 방화 자체는 인정되지만 5·18과 관련해 현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B씨는 앞서 1998년 재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의 행위 역시 헌법의 존립 및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로 봐야 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식용견 농장서 발견된 진도개...혹시?

4마리 확인...진도군 천연기념물 관리 허술 도마 위에

서는 "악의적 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한 개 65마리 가운데 지난 8월 1마리가 진도개임을 확인한 이후, 최근 전자칩을 심어놓은 9마리 중 3마리가 진도개임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진도군 실태조사 결과와 달리, 식용견 농장에 문화재청과 진도군의 보호, 관리를 받아야 할 진

도개 4마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현행 문화재보호법(55조)은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농장을 적발해 진도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화재청과 진도군청은 식용진도개 농장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다.

동물단체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절조망을 엮어 공중에 매달아놓은 이른바 '뜯장' 속에서 발견

돼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도군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면 왜 천연기념물이 식용견들과 함께 발견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의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도개 보호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진도군이 농가들은 분양을 통한 소득 증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중식과 보급, 농가소득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진도개를 제대로 알고 보존, 보호하는 '진도개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